

# 입법정책브리핑

Legislation & Policy Briefing

제2025-3호

발행일: 2025. 4. 1. (화)

제423회 국회(임시회, 2025. 3. 5. ~ 2025. 4. 3.)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는 (사)지평법정책연구소와 함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률안의 정책적 배경과 관련 법정정책 자료를 전달하는 입법정책브리핑을 발간합니다. 입법정책브리핑은 입법과 정책을 통합적 관점에서 고찰함으로써 법이 현실에서 살아 움직이고 정책이 헌법과 법치주의에 기반하여 구현되는 데에 기여하는 기초자료가 될 것입니다.

## 목 차

### 1. 개관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 나. 치유관광산업 육성 · 지원
- 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 별도의 인용표기가 없는 인용문과 그림 및 도표는 원문을 링크해 두었습니다.

## 1. 개관

제423회 국회(임시회)는 2025년 3월 5일부터 2025년 4월 3일까지 30일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2025년 3월 13일 열린 제1차 본회의에서 42건, 3월 20일 열린 제2차 본회의에서 18건으로 모두 60건의 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제423회 국회 제1차, 제2차 본회의를 통과한 주요 법안으로는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에게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2)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계약에서 부당특약을 무효화하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해외사업자에게 국내대리인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부여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민연금 보험료율·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등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5) 치유관광산업의 개념을 정의하고 지속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 등이 있습니다.

제423회 국회의 2025년 3월 13일, 3월 20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총 60건의 법률안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은 정부로 이송되어 공포 후 시행됩니다.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	법제사법위원회(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2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석준 의원 등 11인
3		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제사법위원장
4	정무위원회(6)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5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6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7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정무위원장
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이헌승 의원 등 12인
9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영하 의원 등 13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10	교육위원회(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교육위원장
11	외교통일위원회(3)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12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외교통일위원장
13		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성원 의원 등 10인
14	행정안전위원회(1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6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7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행정안전위원장
18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달희 의원 등 10인
19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0		파산선고 등에 따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6 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박정현 의원 등 15인
21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
2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 등 11인
23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 등 10인
24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한병도 의원 등 10인
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12)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6		관광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7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8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임오경 의원 등 10인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29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2)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조계원 의원 등 19인
30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등 10인
31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최보윤 의원 등 10인
32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덕 의원 등 10인
33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등 10인
3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등 10인
35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재정 의원 등 10인
36		예술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0인
37	보건복지위원회(24)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8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39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0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2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3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4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6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7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48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소관위원회(건)	의안명	제안자
49	보건복지위원회(24)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남희 의원 등 10인
50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희승 의원 등 17인
51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 의원 등 10인
52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종태 의원 등 16인
53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1인
54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강선우 의원 등 12인
55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진욱 의원 등 23인
56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윤 의원 등 22인
57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진숙 의원 등 15인
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미애 의원 등 11인
59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현정 의원 등 10인
60		아동의 빈곤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수진 의원 등 17인

이번 호에서는 여러 중요한 법안 가운데 법정정책적으로 의미 있는 것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치유관광산업 육성·지원, 국민연금제도 개혁 이슈를 다룹니다.

## 2. 주요 법정정책 이슈

### 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등

#### 개요

현행 「상법」 제382의3은 이사의 충실의무를 규정하면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자본시장 혁신과 선진화를 모토로 일반(소액)주주의 권리와 이익 보호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해 왔습니다. 회사의 합병, 물적분할 등 과정에서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은 아니

나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문제 등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관련하여 [입법정책브리핑 제2022-11호 물적분할 반대 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이슈 등 내용 참조). 일각에서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의 주요 원인으로 기업 지배구조의 문제와 주주이익 보호 장치의 미비 등을 들면서 지배주주 및 경영인의 대리인 문제(agency theory) 해소 방안과 일반주주의 이익 보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기업가치 제고(밸류업)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뿐만 아니라 ‘주주’로도 확대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률 개정에는 기업 등 경제단체는 회사 이사 간 위임계약에 근거한 회사법 체계가 훼손될 우려가 있고, 다양한 주주들의 이익을 모두 확인하고 합치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소송 남발로 인한 사법리스크 증가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습니다. 주주이익 보호 등은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진행해야 할 문제라는 의견입니다. 현재 「상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된 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등 경제8단체는 정부에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3일 본회의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는 등 내용의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법제사법위원회	<p><b>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주주가 주주총회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일본 등 다른 나라와는 달리 전자주주총회(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해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상장회사의 경우 정관으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전자주주총회를 소집지에서의 총회와 병행하여 개최할 수 있도록 하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한 일정한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병행 개최를 의무화함으로써 상장회사의 의사결정에 있어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p>	2025-03-13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36.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모험자본 활성화(금융위)

#### 과제목표

우리 자본시장의 공정성 제고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구축  
자본시장과 실물경제의 지속적인 성장 도모

#### 주요내용

(주식·금융투자상품 등 과세제도 합리화) 개인투자자(초고액 주식보유자 제외)에 대한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투자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장치 법제화 이후 추진

(공매도 제도 개선) 개인이 공매도 과정에서 주식을 빌릴 때 적용되는 담보비율(現, 140%)을 합리적으로 인하하는 등 공매도 운영 개선 추진

(물적분할 관련 주주 보호) 신사업을 분할하여 별도 자회사로 상장하는 경우 모회사 소액주주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정비

(상장폐지 요건 정비) 기업 회생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상장폐지 결정, 상장폐지를 단계적 추진하여 투자자 보호 강화

(내부자거래 규제 강화) 내부자 지분매도 시 처분계획을 사전 공시토록 하고, 주식양수도에 의한 경영권 변경 시 소액주주 보호 장치 마련

(투명성·공정성 개선) 외부감사인 역량 강화를 통해 회계투명성을 제고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관련 제재 실효성 제고 등 증권범죄 대응 강화

(외환시장 선진화) 외환시장 접근성 개선, 대외거래 규제 완화 등 외환시장 선진화 및 국부펀드 역할 확대 등을 통한 해외투자소득 제고

###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 ① 디지털 혁신금융 및 민간 혁신성장 지원 확대

- (규제혁신) 디지털 환경 변화에 맞춰 금융·비금융간 융합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금융산업 규제 전반 개선
  - \* (예시) 금융사와 비금융사(IT 등)간 협업 및 경쟁이 가능하도록 업무장벽 완화
- '금융규제개혁 TF'(가칭, 신설)를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 빅테크 성장, 기후변화 등에 대응한 금융안정·혁신 과제 발굴·추진
  - \* 금융위 등 금융감독유관기관, 금융업권, 학계·연구원 등의 전문가로 구성
- (디지털자산 제도화)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을 통해 투자자 신뢰를 토대로 가상자산 시장이 책임있게 성장하는 환경 조성
  - \* (예시) 디지털자산 발행·상장 주요 행위규제 등 소비자보호 및 거래안정성 제고방안 마련
- (정책금융 역할 재정립) 정책금융이 민간의 역동적 혁신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도록 민간과의 중복을 최소화하는 등 역할 재정립
  - \* (예시) 민간금융 영역의 정책금융 점진적 축소, 정책금융 성과평가발전적 재편 추진
- (신뢰편의 제고) 물적분할시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불공정거래 행위 제재 실효성 제고, 은행권 예대금리차 비교공시(22.3/4) 등 추진
  - \* (현행) 예대금리차 개별공시(3개월 주기) → (개선) 비교공시(1개월 주기)

#### ② 자본시장 활성화 및 외환시장 선진화 추진

- (자본시장)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 해소를 통한 자본시장 제도약 기반 마련 및 모험자본 활성화로 실물경제의 지속적 성장 뒷받침
  - \* 소액주주 권리보호 강화, 공정한 자본시장거래질서 확립, 낡은 규제 허파 등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2년 유예하고 초고액 주식 보유자 외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 폐지, 증권거래세 선제 인하(22년 0.23% → '23년 0.20%)<sup>1)</sup>
  - 1) (현행) 종목당 10억원 이상 또는 종목당 일정 지분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부과 (개선) 초고액 주식보유자(종목당 100억원 이상)를 제외하고 양도소득세 폐지
  - 2) 당초 금투세와 연계 인계계획이었으나 금투세 유예에도 불구하고, 선제 인하(크로스피코스대)
- (외환시장) 해외소재 금융기관 등의 국내 외환시장 참여 허용, 개장 시간 연장, 공정한 경쟁여건·거시건전성 제도보완 추진(22.3/4 발표)
  - \* 1단계로 린턴시장 마감(한국시간 2시)까지 연장하고 향후 24시간까지 단계적 확대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 **(인수합병) M&A 활성화 지원 및 투자 애로 해소 지속**
  - M&A 활성화를 위한 금융·컨설팅 지원<sup>1)</sup> 등을 지속하고, **M&A 기업과 주주간 이익 균형 등을 위한 상법개정안 마련<sup>2)</sup>**
  - 1) 산은 등 정책금융기관 1.8조원 규모 M&A 전용 유동성지원 프로그램 운용, Cross-Border M&A 전담부서 및 해외데스크(홍콩) 운영(산은) 등
  - 2) (예) M&A기업-주주간 법률관계 합리화, 주주보호 위한 주식매수청구권 확대 등
  - 중소·벤처기업 전용 M&A 플랫폼을 구축하고, **벤처투자 회수 촉진을 위한 중소·벤처기업 M&A 활성화 방안<sup>\*</sup> 마련**
  - \* 민간 M&A 중개·자문 서비스에 대한 중소벤처기업 접근성 제고 등

출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2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5. 1. 2.)

- ㉔ **(주주가지 제도기반) 투자자 보호 및 지배구조 개선 지속 추진<sup>역동</sup>**
  - **지성과기업 효율적 퇴출 유도 위한 상장폐지 절차 개선<sup>\*</sup>**
  - \* 상장폐지 심사 시 거래소가 부여하는 최대 개선기간  
(코스피 최대 4년, 코스닥 최대 2년) 및 심의단계(코스피 2심제, 코스닥 3심제) 축소
  - **스튜어드십 코드 가입 연기금·운용사(총 238개)의 적절한 의견권 행사 등 수탁자책임 이행 제고방안 연내 마련**
  - **합병·분할시 이사회 의 주주 이익 보호규정 신설 등 일반주주를 실효적 보호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sup>\*</sup> 추진**
  - \* ①합병 등 결정시 주주의 정당한 이익 고려,  
②상장기업간 합병비용 규제개선 및 외부평가공시 의무화,  
③물적분할 후 자회사 상장시 공모 신주의 20%를 기존 주주에 우선배정 허용
  - **공매도 재개가 가능하도록 제도개선<sup>\*</sup> 마무리<sup>(25.3)</sup>**
  - \*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대차대주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공매도잔고 공시 확대 등

출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참고 자료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준호 의원안 등: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 부과 등](#) 2024. 8.

['개미투자자보호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모회사 쪼개기 상장과 소액주주 보호:자회사 물적분할 동시 상장 이대로 좋은가](#)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이사의 충실의무\)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한국주식시장 부스트업을 위한 지배구조개선제도 토론회:이사의 충실의무 및 MOM 상법개정을 중심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2025년 법무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법무부 누리집

[2025년 금융위원회 주요업무 추진계획](#) 금융위원회 누리집

[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다52407 판결](#)

[대법원 2009. 5. 29. 선고 2007도4949 전원합의체 판결](#)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논평](#)

[상법 개정안 법사위 제1소위 통과에 대한 경제8단체 입장문](#)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NARS 현안분석」 2022. 6. 2.

□ 회사의 물적분할과 자회사 상장은 현행 「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적법한 행위임. 다만, 소액주주들이 주가 하락피해를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어, 이에 대한 소액주주의 보호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물적분할이 분할 후에 신설된 자회사를 상장하는 절차로 이어지면서 대주주에게 ‘지배력을 상실하지 않으면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음

- 이로 인하여 ① 소액주주의 주주가치 훼손, ② 소액주주 권리이전, ③ 이해상충(모회사 소액주주 vs 자회사 소액주주, 기존 회사의 대주주 vs 소액주주)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음

□ 소액주주 보호 방안으로 ①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 의무 신설 방안, ②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방안, ③ 신주인수권 부여 방안, ④ 소수주주의 다수의결권(Majority of Minority) 제도 도입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으며, 각각의 방안에 장단점이 혼재하고 있음

□ 법령을 개정하여 회사법 이론과 판례를 변경하는 것은 법원과 학계, 재계, 소액주주 등 각 측의 의견수렴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토대로 법무부와 금융당국을 포함한 관계기관에서 물적분할 및 자회사 상장에 따른 소액주주 보호를 위한 법률적·정책적 논의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나. 치유관광산업 육성·지원

### 개요

치유관광은 ‘웰니스 관광’으로도 통용되며, 경관, 온천, 음식, 맨발걷기길 등 치유관광자원을 활용해 건강의 회복과 증진을 도모하고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관광활동을 말합니다. 이는 치료보다는 여가를 통해 스트레스와 불안을 감소시키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건강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주요 활동으로는 자연 기반 관광, 명상, 요가, 온천, 웰니스 스파 등이 포함되며, 관광객이 자연과의 조화를 통해 정신적·신체적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설계됩니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 2024)에 따르면 지난 2023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8,302억 달러에 이르며 오는 2028년까지 연평균 10.2%의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대한민국의 2022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54억 달러로 세계 17위 수준이며, 성장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회는 치유관

광산업을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법률안을 마련하였습니다.

2025년 3월 20일 본회의에서는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치유관광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p><b>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대안)</b></p> <p>최근 몸과 마음의 건강과 균형을 바탕으로 치유와 회복을 추구하는 치유관광활동과 치유관광시설, 치유관광프로그램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치유관광의 명확한 정의, 대상, 사업적 범위, 지원 근거 등 제도적 기반이 미비하여, 치유관광의 체계적인 개발과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치유관광’에 대한 법적, 정책적 개념을 정립하고,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우수시설에 대한 인증, 치유관광 전문지원기관 등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치유관광의 산업적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p>	2025-03-20 (원안가결)

## 정책 동향

[120대 국정과제] 61. 여행으로 행복한 국민, 관광으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문체부)

### 과제목표

코로나19 이후 심각한 침체를 겪은 관광시장의 빠른 회복 및 재도약  
국민 여행 기회 확대, 지역 경제활력 제고, 관광산업 미래 경쟁력 확보

### 주요 내용

- (시장 회복 및 재도약) 업계 피해 지원 확대, 관광시장 회복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 대대적 여행할인행사, 관광축제, 박람회, 외국인관광객 환대캠페인 등 종합적·체계적 지원을 통해 관광 시장 조기 정상화 추진
  - 인바운드 생태계 회복 및 한류 활용 해외 마케팅, 동북아 역내협력 강화, 고부가가치 시장 육성
- (모두를 위한 여행) 이동취약계층을 위한 관광환경 개선 및 관광체험 지원, 국민 여행비용 지원 확대 추진
- 차박, 반려동물 동반 여행 등 새로운 여행 트렌드 등 신수요 대응
- (지역특화 관광개발) 권역별 광역관광개발, 주민·기업 참여형 관광개발 및 미식관광, 야간관광, 생활관광, 한류 활용 관광 등 지역관광 자원 개발
- 지역이 하나로 통합되고, 내륙도시의 활력을 높이는 광역관광 개발, 제주를 세계적 명품관광도시로 육성, 특화 관광진흥계획 수립·집행 추진
- (관광산업·인재 육성) 스마트관광 생태계 확산, 미래융합형 관광 인재 양성, 혁신적 관광벤처 육성,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산업 경쟁력 강화

(웰니스 관광 활성화) 코로나 19로 지친 마음에 ‘치유’와 ‘행복’을 주는 힐링 여행 활성화  
- 웰니스 관광산업 기반 구축, 「(가칭)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정

2023 정부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부, 2023. 1. 4.)

③ **형편어진 관광생태계를 복원하는 재정비·제도약 전략**

- (규제혁신을 통한 제도약 지원) 관광산업 생태계 회복을 위한 규제개선\*, 고용지원·해외인력 고용규제 완화 등 인력난 해소 추진
  - \* ▲ 호텔업 유원시설업·국제회의업 사업자 부담완화 및 관광사업자 재창업 규제 완화, ▲ 외국인 숙박요금 부가세 환급 연장(22년~25년), ▲ 방문취업 비자+고용 인증 확대(45성 호텔 마이스업)
- (관광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관광기업 육성펀드를 3,000억 원 규모로 확대 조성(23년), 해외관광기업지원센터\* 확충(23년 도쿄)으로 투자 확대
  - \* 싱가포르 관광기업지원센터 개소(22.8월) 이래, 4개월간 투자 82억 원 유치 성과
- (스마트·디지털 관광 전환) 스마트 관광도시 신규 조성(23년 3개소), 전통 관광업계와 트래블 테크 기업 협력 네트워크 강화
  - 관광-ICT 융합형 교육 운영 및 지역대학 등 산학연계 현장 중심 역량 강화
- (신시장 창출로 산업 트렌드 선도) 건강·복지의 관심 증가에 따른 웰니스·의료관광 육성\*, K-컬처 융복합 국제회의 발굴 등 마이스업 제도약 지원\*\*
  - \* 웰니스관광도시 선정(23년~, 연 1개소), 웰니스의료관광융합클러스터 선정(23년~, 6개소), 의료관광 유치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비자 개선 등) 및 맞춤형 마케팅 강화
  - \*\* 글로벌 K-컨벤션 운영, 국제회의 복합지구 지정 확대(22년 5개소 → 23년 이후 7개소)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2024 정부 업무보고(문화체육관광부, 2024. 2.)

【방한 2천만 달성 프로젝트】

- ① **(융복합 관광)** 문화예술, 스포츠 등 모든 불거리, 즐길거리, 놀거리를 연계, 특색있고 규모있는 글로벌 축제 및 관광 상품화, 해외 통합마케팅
- **(K컬처×관광)** 대형 한류 페스티벌(24.10월) 등 K-팝 콘서트\*, 지역 우수 문화관광축제 글로벌화 지원(신규, 25억원), K-팝 커버댄스·이스포츠 관광
  - \* 드림콘서트(24.6월), 대형 한류 페스티벌(24.10월) 등 민간·지자체 개최 K-팝 콘서트 연계
- **(예술×관광)** 공연관광 ‘웰컴대화로’와 공연예술 연계로 대학로 글로벌 공연축제(24.10월), 미술주간과 키아프·프리즈 아트페어 연계 추진(24.9월)
- **(뷰티의료×관광)** K-뷰티·패션·의료 융합 대규모 페스티벌 개최(24.6월), 치유관광지 확대(23년 64개소→24년 70개소) 등 치유·의료관광 육성
- **(스포츠인딩)** 스포츠 대회 유치 및 이벤트 발굴, 융복합 프로그램 지원(40억원), 세계질 혼란 경기 가능한 전자훈련 특화시설 확대\*\* 및 방한 인센티브 제공으로 선수 동호인\*\*\* 유치
  - \* 국내외 대회 개최, 인프라 개선, 생활체육, 브랜딩 컨설팅, 마케팅 전략 등 종합 지원
  - \*\* (20~23) 경북 경주(완공), 경남 창원, 강원 춘천, 충남 보령, (24) 2개소 추가
  - \*\*\* (예) 일본 생활체육 동호인 대상 방한 인센티브 제공 등 외국인 특수목적관광(SIT) 유치 확대
- **(국제회의×관광)** 대표 융복합 국제회의 육성 지원(6개), 지역 이색 회의명소(52개소) 활용 컨설팅 지원 등으로 국제회의 유치·개최 활성화

출처: 2024 주요정책 추진계획 문화체육관광부 누리집

## 참고 자료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윤덕 의원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근거 법률 제정](#) 2024. 11.

[배현진 의원안: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근거 법률 제정](#) 2024. 8.

[\(여행, 힐링이 되다\) K-웰니스, 국가전략산업으로](#)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국내 휴양치유관광 산업 국회 정책토론회](#)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치유관광산업 육성법’ 내년 시행... ‘웰니스관광’ 활성화 기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치유와 회복 추구하는 ‘웰니스관광’ 육성 토대 마련](#)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웰니스관광 정책분석 및 법제화 방안 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2023. 1.

[연구의 목적]

웰니스관광 추진 현황 분석 - 웰니스관광 동향 및 특성, 개념 및 범위 분석 / 주요 부처별 추진현황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웰니스관광 클러스터 추진 사례 및 개선 방안 도출

웰니스관광 법제화 기본 방향 수립 - 웰니스관광의 정책적 영역 및 목표 정립 / 웰니스관광 법제화 기본 방향 수립

웰니스관광 법률(안) 제시 - 웰니스관광 법률(안)의 주요 구성 요소 및 세부 항목 도출 / 관련 법과의 차별성 및 관계성 검토 / (가칭) 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제시

[국내 해양치유관광 육성 계기 마련](#)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MI 동향분석」 2017. 11.

해양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 추진의 계기가 마련되었다. 2017년 10월 해양수산부는 해양치유자원 발굴 및 산업 육성 협력 지자체로 경남 고성군, 경북 울진군, 전남 완도군, 충남 태안군 등 지자체 4개소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4개 지역은 지역별 해양치유자원 효능검증과 함께 치유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치유관광산업은 삶의 질 향상과 경험주의 관광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라 웰니스, 휴식, 휴양을 테마로 성장하고 있다. 세계 웰니스 연구소(Global Wellness Institute)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웰니스 시장의 경제적 가치는 약 4,000조 원으로 세계 경제 생산의 5.1%를 차지한다. 그 중에서도 웰니스 관광산업은 약 638조 원 규모로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이는 일반 관광시장의 연평균 성장률 3.4%와 비교할 때 2배에 가깝다.

세계 해양치유시장은 유럽을 중심으로 활성화되어 있다. 프랑스는 해양요법을 대중적인 치료법으로 활용하며 사회보험으로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 내 해양요법시설은 83개 이상이며 해양요법전문기관 연합체인 ‘프랑스 탈라소(France Thalasso)’가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독일은 치유휴양지인 쿠퍼오르트를 중심으로 해양치유를 지원하고 있다. 독일 전역에 350개 이상의 쿠퍼오르트가 운영 중이며 이 중 해양치유 및 해수욕 쿠퍼오르트는 32개소이다. 일본은 1990년대 오키나와현에서 프랑스식 해양요법시설을 도입하면서 해양치유를 시작하였다. 일본의 해양치유산업은 해양심층수를 이용한 클러스터 개발로 이를 생산·판매·연구하는 종합단지를 갖추고 있으며 심층수, 해니, 해조, 광선, 에어로졸 등을 이용한 해양치유관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국내 치유관광은 산림분야에서 활성화되어 있다. 산림치유부문은 숲 자원을 중심으로 환경부, 산림청 등 중앙 정부와 각 지자체가 치유사업을 발굴 및 운영하고 있다. 특히 산림청은 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산림치유원 등 산림자원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산림치유공간과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 중이다. 또한 1990년대부터 산림치유, 산림휴양, 산림복지를 위한 법령과 제도가 추진, 정비되어 왔으며 최근 대국민 산림복지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전 세계적인 관광 트렌드의 변화에 따라 자연자원을 활용한 치유관광산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에 따라 해양관광 패러다임 전환과 해양자원을 활용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기회로 해양치유산업을 활용해야 한다. 이번 4곳의 해양치유 연구협력 지역 선정은 지역의 고유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해양관광 모델을 발굴하여 관광경쟁력 개선과 부가가치 제고를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해양치유가 해양복지서비스로도 발전될 수 있을 것이다. 지역별 해양치유 거점 육성, 체계적인 해양복지서비스 제공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우선 각 지역별 해양치유자원의 치유효과에 대한 R&D가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산림치유지도사와 같은 전문 인력(해양치유지도사)을 양성하기 위한 인력 양성센터도 설립해야 한다. 이러한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법(해양치유에 관한 법률 등)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농림해양 기반 치유산업 활성화](#)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2024. 10.

이 연구는 우리나라 농산어촌 자원이 가지고 있는 다원적 가치를 제고하고 농림해양 자원의 무한한 유용성에 기반한 치유산업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됨.

## 다. 국민연금제도 개혁

### 개요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는 연금개혁을 위한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이하 '연금특위')가 구성되어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4대 공적연금 및 기초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하였으며, 연금특위가 구성한 민간자문위원회에서 2023년 11월 모수개혁안 두 가지 및 구조개혁 방안을 담은 활동보고서를 연금특위에 보고하였습니다. 민간자문위원회가 마련한 두 가지 모수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1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기금 예상 고갈 시점 7년 연장)과 '더 내고 그대로 받는' 2안(보험료율 15%, 소득대체율 40%, 기금 예상 고갈 시점 16년 연장)이었습니다. 연금특위는 2024년 1월 31일 총 11인으로 구성된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를 출범하였고, 시민 대표로 구성된 의제속의단(50명)이 구체화한 의제를 시민대표단(500명)이 학습한 후 숙의토론을 거쳐 연금개혁 시나리오를 최종 선택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토대로 제22대 국회는 여러 가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여야합의로 국민연금제도 개혁 법안 등을 18년 만에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일부 청년들은 이번 개혁방안이 기성세대의 이익을 위해 젊은 세대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2025년 3월 20일 본회의에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을 확대하는 한편,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시하는 등 내용의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또한 당일 본회의에서는 연금재정 안정화 조치와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도 처리되었습니다.

## 입법 동향

	소관 상임위원회	의안명과 주요 내용	의결일자 (본회의 결과)
1	보건복지위원회	<p><b>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b></p> <p>제5차 재정계산(2023)에 따르면 국민연금기금은 인구구조 및 경제상황 등의 변화로 2055년경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2024년 11월 기준 노령연금의 월평균 급여액은 약 65만원으로 적정 수준의 노후생활 영위에 필요한 금액에 미치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또한, 2007년 도입된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에 대하여는 각 크레딧으로 산입되는 가입기간이 군복무 또는 출산으로 인한 가입이력 상실을 보전하기에 충분하지 아니하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음. 한편 2022년부터 시작된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와 관련하여서도, 휴·폐업 등의 사유로 연금보험료 납부를 중단하였다가 재개한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연금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음. 이에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노후소득 보장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인상하고, 2025년 기준 41.5%인 명목소득 대체율을 2028년까지 매년 0.5%p씩 하향하여 40%가 되도록 하려는 현행 인하계획을 중단하면서 명목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하며,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하여 국가가 국민연금급여의 지급을 보장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인 군복무와 출산에 대한 보상 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군복무크레딧과 출산크레딧으로 추가 산입되는 가입기간을 늘리는 등 보장성을 강화하며,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완화하기 위하여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제도의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p>	2025-03-20 (원안가결)

## 정책 동향

### [120대 국정과제] 42.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 개혁 (복지부)

#### 주요 내용

**(상생의 연금개혁)**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공정성 제고 및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한 상생의 연금 개혁 추진

- 국민연금법에 근거한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실시하고, 장기 재정전망에 기반하여 국민연금 제도 개편안 마련
- ‘공적연금 개혁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한 기반 마련
- 상생의 연금개혁과 병행하여 현세대 노인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인상(40만 원)

**(사회보장제도 통합 관리)** 사회보장위원회의 정책 조정기능 강화를 통해 사회보장제도 기획·운영·평가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

- 중앙부처·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전수DB 구축을 통해 사회보장사업 사전협의 내실화 및 사후 평가 강화 등 체계적 관리 추진
- 사회보장 행정데이터·통계체계 구축 등 객관적 분석에 기반한 사회보장정책 수립 및 평가를 통해 사회보장 제도개선 지원

##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2022. 6. 16.)

### ③ 적정 노후소득 보장 및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연금개혁 추진

- **(공적연금 개편)** 국민연금 재정계산(23.3월)을 통한 국민연금 개선안 마련(23.7) 및 공적연금개혁위원회를 통한 공적연금 개혁 논의 추진
  - \* 국민연금기금의 장기적 수익성 제고를 목표로 전문성·책임성·독립성 강화를 위한 기금운용 개선방안 논의 병행
- **(사적연금 활성화)**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를 위해 **세계혜택 확대**<sup>1)</sup> 등 개인·퇴직연금의 가입률·수익률 제고 유도
  - \*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 (현행)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개정) 600만원<900만원>
-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부담 경감<sup>2)</sup>, 소득 중심 건보료 부과 등을 위해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개편 추진(22.7)
  - \* 지역가입자 재산공제 확대(최대 1,350만원 → 일괄 5,000만원)

출처: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022. 6. 1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23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2. 12. 21.)

### ③ [연금개혁] 장기재정추계 등을 바탕으로 제도개혁 본격화

- **(국민연금)** 재정추계 결과(23.3)를 토대로 국민연금 개혁안 및 연금운용 개선방안 마련
-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단기 제도개선 과제<sup>1)</sup>를 마련(22.12)하고 중장기 과제<sup>2)</sup>는 작업반 논의후 종합계획에 반영
  - 1) 연 365일 초과 외래이용자 본인부담을 상향 검토, 외국인 피부양자 가입자격 강화 등
  - 2) 진료비 지불제도 다변화, 수가 결정구조 개편, 건강보험 투약성 강화 등
- **(요양보험)** 장기요양기관 관리·감독 강화 및 요양 대상자 합리적 이용 유도
  - \* 장기요양기관 경쟁제 시행(25) 대비, 부실기관 퇴출 등 세부방안 마련, 통합판정 체계 도입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의 적정급여 이용지원 강화
- ※ **중장기적으로 8대 공적연금·사회보험의 통합재정 추계를 실시하고 4대보험 신고사무 효율화<sup>3)</sup> 등 제도개선 방안 검토**
  - \* (예시) 국민연금-건강보험 등 보험별 신고시기 일치 등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 ③ [연금개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 및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

- **(국민연금)**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23.10)하고 국민연금 운용성과 제고 및 사각지대 해소 추진
  - \* 기금운용본부의 역량·책임성 제고<sup>1)</sup>, 거버넌스 개선(전문성 강화 방안 마련 등)을 추진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sup>2)</sup> 검토
    - 1) 기금운용 수익률 제고를 위한 합리적인 인력 배차가능 강화, 성과급 체계 개편 등
    - 2) (출 산) 둘째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50개월 가입기간 인정 (군복무) 6개월 가입기간 인정
- **(건강보험)**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하여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에 반영
  - \* 행위별 수가제 외에 사후 보상, 성과 기반 차등보상 등 대안적 지불제 도입 추진
- **(고용·산재보험)** 신고사무 효율화를 위해 조세·사회보험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체계(근로복지공단) 마련

출처: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2023. 7.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24년 경제정책방향(2024. 1. 4.)

### ② 지속가능한 국민연금·건강보험 제도 구축

- (국민연금) 국회 연금개혁 특위 공론화 과정 통해 국민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구체적 개혁방안 마련 지원
  -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및 「재정추계 실무단」 운영(24.1월~)
- 관계부처 협의체(기재부·복지부·고용부·국조실 등) 통해 국민연금·기초연금·퇴직연금 등 다층적 노후소득 보장체계 개편방안 논의
- (건강보험)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년)」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보장성 강화, 지출 효율화 등 추진
  - 임신·출산·노후 등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지원을 강화하고, 소국민 마음돌봄체계를 구축하여 정신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 난임시술 지원확대(21~25회, 체외수정 시술별 횟수제한 폐지),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실시 등
  - 의료서비스 과다이용자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상,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예외 항목 신설 등 건강보험 지출구조 효율화 추진
  - (現) 진료 횟수와 무관하게 적용 → (改) 과다·부적정 이용시 적용 제외
  - 직장·지역가입자 간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 가입자의 재산·자동차에 부과되는 보험료 부과기준 개선 검토

출처: 활력있는 민생경제 - 2024년 경제정책방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5년 경제정책방향(관계부처 합동, 2025. 1. 2.)

### ① 국민·퇴직연금 등 연금의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능 강화

- ①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 세대간 형평성 제고, 노후소득 보장 강화라는 방향성 하에 국회 연금개혁 논의 지원
  - 21년 만에 정부의 단일 연금개혁안 제시(24.9월)
- ② (퇴직연금) 단계적 의무화, 수익률 제고 등 추진 역동
  - [단계적 의무화] 중 사업장 대상, 규모(대→소)순으로 단계적 의무화
  - [수익률 제고] 사적연금시장 경쟁 환경 조성, 운용규제 개선 등 퇴직연금 수익률 제고를 위한 종합적 방안 마련 추진
    - 예) 실물 이전, 로보어드바이저(RA) 투자알림 시범사업 추진, 디폴트옵션 제도개선 가입자 선택권 제고를 위해 공적·민간기관 등이 참여하는 기금형 제도 도입 검토 등
  - [연금화 촉진]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 강화 등 중도 누수 방지 방안 검토 및 국민연금 개혁방안 추진일정과 연계해 세계예탁 확대 추진
    - 퇴직소득 연금수령시 세금 감면 구간 추가(10년: 30%, 10년! 40% → 20년! 50% 감면 산화) 등 검토
- ③ (개인연금) 일시금이 아닌 연금 수령 유도를 위해 연금 형태도 중신 수령시 연금소득세율 인하(4→3%)
  - 국민연금 개혁방안 추진일정과 연계해 법령개정 추진
- ④ (주택연금) 저소득층 주택연금 가입 활성화를 위해 기초생보 제도상 보충급여 원칙과 상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도개선 방안 검토
  -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시 매월 수령하는 주택연금액의 50%를 소득으로 반영

출처: 2025년 경제정책방향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2. 8. 19.)

### ①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재정계산) 연금개혁에 대한 공감대 마련 및 국회 연금특위(~23.4) 논의를 위해 8월 중 재정계산에 착수
- (모수개혁) 국회 특위 논의내용을 반영하여 기초연금 인상방안(30→40만원)과 연계한 국민연금 개편안 마련 및 국회제출
- (구조개혁) 직역연금과의 통합 등 구조개혁은 이해관계가 복잡한 점을 감안하여 국회 특위가 중심이 되어 논의되도록 적극 참여·지원

출처: 2022 새정부 부처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3 정부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3. 1. 19.)

### 2 지속가능한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

- 재정적 지속가능성, 세대 간 공정성,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개혁 추진
  - (재정추계) 연금개혁 논의 기초가 되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일정을 앞당겨(3월~4월 사전결과 발표) 개혁논의 활성화 및 신속한 개혁안 마련 지원
  - (국회지원) 재정추계 결과를 즉시 제공해 세부개혁안 논의 지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일정(안)>	
▲ 특위 산하 민간자문위 개혁방향 마련 (~22.12)	
▲ 특위에서 정한 개혁방향에 따라 민간자문위 세부방안 도출 (~23.1)	
▲ 도출된 연금개혁 방향 및 세부방안에 대해 국민의견 수렴 절차진행 (~23.4)	

- 국민과 함께 청년에게 희망을 주는 “국민의 연금개혁안” 마련
  - (정보공개) 재정계산위원회 회의록 전체 공개 및 전문가 포럼 생중계 등 개혁 논의내용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유
  - (의견수렴) 개혁 쟁점 상세한 설명(유튜브, SNS 등), 권역별·연령별 세분화된 FGI 및 간담회, 대국민 토론회 등 추진
- 국민연금 제도개선 및 기초연금과 연계한 종합운영계획 국회제출 (~23.10)
- 국회의 국민의견수렴을 지원해 구조개혁 필요성 공감대 조성

출처: 2023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특집페이지

## 2024 정부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4. 3. 21.)

### 2 연금개혁 지속 추진

- (국회 공론화 지원) 개혁안 마련 위한 공론화 과정 적극 참여·지원
  - 논의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시민대표단 학습자료 등), 국회 공론화 지원단 내 실무인력 지원 등 지속 추진
  -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수용성 제고 위해 청년 등 이해관계자 현장 소통 및 대국민 홍보 강화
- (정부 개혁논의 지속) 정부 자문기구 운영 등 후속 논의구조 마련
  - 개혁 자문단에서 사회적 논의과제\* 검토, 공론화 논의 자문 등
  - \* 재정방식 전환예: 확정급여→확정기여 자동안정화 장치 연령그룹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등
  - 추계실무단에서 장래인구추계(23.12 통계청) 반영, 재정 전망 추계
- (제도개선) 연금개혁과 병행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노령연금 소득활동 감액제도 폐지 등 제도개선 추진

출처: 2024 주요 정책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누리집

## 2025 정부 업무보고(보건복지부, 2025. 1. 10.)

### 4 초고령사회 본격 대응

#### 1. 지속가능한 보건복지체계 구축

##### 1) 상생의 연금개혁 지속 추진

- (개혁논의 지원) 정부 개혁안(24.9)을 토대로 국회 논의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참여·지원,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소통 강화
  - (지속가능성) 보험료율·소득대체율·자동조정장치 등 재정안정 방안 논의, 장기수익률 1%p 이상 제고를 위해 기준포트폴리오\* 시행
  - \* (24) 대체투자의 경우, 사전에 정해진 자산군만 투자 가능(부동산 인프라스모펀드) → (25) 수익률에 기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체투자 자산(사모대출 등) 투자 가능
  - (세대형평성)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속도 차등화, 지급보장 명문화 추진
  - (노후소득보장) 저소득층 보호 및 노후소득 강화를 위해 ▲보험료 지원 및 크레딧 확대 ▲기초·퇴직·개인연금 등 다층소득체계 개편 추진

출처: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보건복지부 누리집

## 참고 자료

-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수영 의원안: 보험료율 인상 및 연령대 구간별 인상속도 차등화](#) 2025. 1.  
[김남희 의원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2025. 1.  
[전진숙 의원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 2025. 1.  
[이수진 의원안: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등](#) 2025. 1.  
[김태년 의원안: 출산크레딧 보장 강화 등](#) 2024. 11.  
[김선민 의원안: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2025. 1.  
[김미애 의원안: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등](#) 2024. 11.  
[한정애 의원안: 보험료율 및 명목소득대체율 인상](#) 2024. 8.  
[이수진 의원안 등: 지급보장 · 크레딧 확대 · 소득활동 감액 폐지](#) 2024. 8.  
[남인순 의원안 등: 국민연금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2024. 7.  
[남인순 의원안 등: 출산크레딧 적용 확대 등](#) 2024. 7.  
[전진숙 의원안: 출산크레딧 보장성 강화 및 돌봄크레딧 도입](#) 2025. 2.

[국민연금 개혁의 과제](#)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MZ세대가 생각하는 국가 미래를 위한 연금개혁 방향은?: 제1차 국회 토론회 자료집: 청년 세대에게 국민연금 견해를 묻다](#) 국회의원 정책자료 누리집

[국민연금 개혁: 한눈에 보기](#) 국회도서관 정책연구보고서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보고서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한 공적연금 제도개혁 방안 모색](#) 국회입법조사처 정책연구용역자료

[2055년 국민연금 고갈...미래세대 짐 나눠야 할 때](#) 국회미래연구원 미래생각

[‘연금개혁법안’ 국회 통과, 내년 시행... “오랜 속의 끝 이룬 성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정책뉴스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등 담은 연금개혁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국정과제 30대 핵심성과](#)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문자료

[문재인정부 국정백서\(복지\\_제9권 모두가 누리는 포용국가\)](#)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전문자료

[국민연금 개혁 논의의 쟁점과 의미](#) 국회입법조사처 「이슈와 논점」 2019. 12. 24.

본 보고서는 2018년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근거로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제안한 개혁방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공적연금 개편안, 그리고 ‘국민연금개혁과 노후소득보장특별위원회’가 발표한 참여주체별 방안 등에서 제시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 그리고 기초연금 강화 방안 등을 중심으로 그 쟁점과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사)지평법정책연구소 · 법무법인(유)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이공현 명예대표변호사  
(지평법정책연구소 이사장)  
02-6200-1770  
leekh@jipyong.com



임성택 변호사  
02-6200-1746  
stlim@jipyong.com



윤영규 변호사  
02-6200-1743  
ykyun@jipyong.com



김진권 변호사  
02-6200-1812  
jkkim@jipyong.com



박성철 변호사  
02-6200-1777  
scpark@jipyong.com



신용우 변호사  
02-6200-1974  
ywshin@jipyong.com



민창욱 변호사  
02-6200-1841  
cwmin@jipyong.com



이춘희 선임연구위원  
(지평법정책연구소)  
02-6200-0628  
chy@jipyong.com

지평법정책연구소 · 지평 공공정책솔루션센터 입법정책브리핑의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간단한 설문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설문조사 참여 링크](#)).